

종합·해설

■ 민주 대선후보 경선 파행 들여다보니…

완전국민경선 모바일투표 되레 ‘허점’

ARS 끝까지 듣지 않으면 미투표 처리…‘非文’에 불리 지적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면서 경선 레이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그 문제점이 대부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경쟁력 강한 대선후보를 선출하자던 경선이 ‘주대행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ARS(자동 응답시스템) 방식의 모바일투표에서 후보 안내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투표한 뒤 전화를 끊으면 이를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즉, 기호 1~3번인 정세균·김두관·손학규 후보 지지자가 4번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안내하는 상황까지 듣지 않고 1~3번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전화를 끊으면 모두 ‘미투표’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첫 경선지인 제주 선거인단(3만6329명)의 투표율은 55.3%에 그쳤다. 특히 제주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은 3만2984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의 90.8%에 달하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만9345명으로 투표율은 58.6%에 그쳤다.

이는 올해 치러졌던 1·15 전당대회(80.0%) 및 6·9전당대회(73.4%)의 모바일 투표율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더욱이 이번에는 선거인단 모집이 당시보다 까다로운데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당대표보다 훨씬 관심 많은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같은 모바일투표 방식은 마지막 순번인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문(비문재인) 후보들의 주장이다. 즉, 문 후보 지지자는 ‘미투표’로 처리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ARS에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미투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애초 당 대선경선기획단에서 경선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내 메시지를 넣으라고 지적했지만 당 선관위가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후보 측도 권리당원 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안내 메시지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파국은 막자” 물밀접촉

강원부턴 정상화 될까

표율을 가장할 경우로 계산된 수치다. 나아가 이 미투표수 모두가 1~3번 후보의 지지표라고 가정하면 문 후보의 득표율은 60여%에서 40% 초중반대로 급락하게 된다.

또 순회(대의원)투표의 경우도 현장 연설에 약한 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미리 투표를 한 후 연설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임재정 당 선관위원장이 지난 25일 개표 결과 발표 때, 애초에 고한 대로 ‘순회투표-투표소투표-모바일투표-총계’ 순서를 지키지 않고 총계만 발표한 것을 두고도 순회투표 성적이 3위였던 문 후보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향의

26일 오후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통합당 경선이 모바일투표 불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당원이 임재정 선거관리위원장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

임재정 선거관리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6일 오후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찬물 끼얹은 ‘룰의 전쟁’

후보들 반발 속 기권처리 재투표 실시 등 요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 파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울산 경선은 파행됐지만 강원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 파행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도부와 후보들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비문(비 문재인) 후보들의 제기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제주와 울산 지역 모바일 투표 결과, 미투표 처리된 국민 선거인단에 재투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합동간담회가 있었다”며 “제주·울산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를 재검토해 문제가 되는 선거인은 절차를 밟아 투표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강원도 모바일 투표는 26일 실시하지 않고 고지사항(무효 관리)을 강화, 27일 하

루에 실시하기로 했다”며 “권리당원은 투표가 미성립된 경우 이미 현장 투표 기회가 제공됐거나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손학규, 김두관 후보 등이 제기한 모바일 투표 문제점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과 27일 각 후보와의 물밀 접촉 등을 통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도부와 각 후보 측이 모두 파국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28일 실시되는 강원지역 경선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문 후보 진영에서는 강경 기류도 포착되고 있다. 이미 제주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 ‘내세론’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룰’을 확실하게 보완하지 않는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모바일 투표 등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강원 경선도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지도부는 당일 저녁과 26일

오전 제주 현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한편, 각 캠프 측 대리인을 불러 선관위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손학규 김두관 캠프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했다.

비문 후보 캠프는 26일 오전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서로 유사한 요구안을 마련하고, 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울산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 요구안은 후보를 거명하는 안내 메시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후보 번호를 찍은 뒤 전화를 끊어 기권으로 처리된 선거인단을 상대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 호명 방식을 후보 기호 순서로 토레이션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제일 먼저 경선 행사를

울산 종합체육관에 도착해 경선이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낳았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권리당원을 재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 후보가 반발, 행사장을 떠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와 함께,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행사장 근처에서 머물던 손학규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김두관 후보도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울산 지역 경선은 2시간 가까이 개회도 선언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불참속에 대의원 현장 투표를 강행했다. 세 후보의 불참으로 인해 예정된 합동연설회는 1분짜리 동영상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경선 끝 후폭풍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통일준비에 나설때입니다.